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0. 13.(목) 09:30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	책임자	과 장 이동엽 (02-2100-2530)
		담당자	사무관 송희경 (02-2100-2531)

김소영 부위원장, 제5차 「금융리스크 대응 TF」 회의 개최

- 디지털·플랫폼 금융 확산과 잠재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안 점검 -

주요 내용

- 금번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논의
- ① 디지털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위험요인과 리스크 관리 방안
 - ② 금융회사의 제3자 업무위탁·제휴 관련 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
 - ③ 디지털 지급수단의 성장과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 과제

1 회의 개요

-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'22.10.13일(목) 유관기관과 함께 제5차* 「금융리스크 대응 TF」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 등 큰 변화 속에 잠재해 있는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* 앞서 1~4차 회의는 각각 5.18일·6.23일·7.26일·8.31일에 개최(금융위 보도자료 참조)

■ 일시·장소 : '22.10.13일 (목) 09:30~11:00,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
■ 참석

-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주재), 사무처장, 관련 국장
-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및 관련 국장, 예금보험공사 부사장
-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, 금융연구원

■ 논의내용 : 디지털·플랫폼 금융의 확산에 따른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 등

2 주요 논의내용

-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·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시켜 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- 다만,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,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,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,
 -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한국은행·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디지털금융의 잠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적·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오늘 회의에서는 「금융의 디지털화·플랫폼화의 진전」과 「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」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및 금융감독 이슈 등을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.
- ① 우선, 핀테크·빅테크의 성장에 따라 발생가능한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,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.
- 예컨대, 핀테크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금융서비스에 빠르게 접목하고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고객 접점과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성장경로가 예상되는 만큼, 관련 영업·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에 적합한 감독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*.

* (영업·운영리스크) ①IT기술 이용에 따른 리스크(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·연결하는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), ②불완전 판매 가능성, ③빅테크 그룹內 위험 전이 등
(시장리스크) ①금융시장 경쟁 격화, ②특정상품 쏠림현상 등

②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등 제3자 업무위탁·제휴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.

- 금융회사가 대출·카드모집,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*에 주목하고,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직·간접 감독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* (영업·운영리스크) ①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이 일부 수탁사(핀테크·빅테크사)에 집중,
 ②금융회사와 수탁자간 규제격차 등
 (시장리스크) 금융회사와 수탁사(비금융회사)간 상호 연계성 강화에 따른 리스크 전이 등

③ 또한, 최근 이용이 확대된 결제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바,

- 선불지급수단¹⁾과 관련하여 **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** 등 보완방안 마련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(간편결제 등)에 따른 **리스크 요인²⁾**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.

1) 예시 : 네이버선불충전금(네이버페이), 카카오선불충전금(카카오페이) 등

2) 예시 : 선불지급수단 이용자예탁금 보호 미흡(상환불이행 위험 등), 비금융사 지급결제 서비스의 보안사고(고객정보 유출 등) 우려 등

3 향후 추진계획

□ 금일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이 활용될 때,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, 금융안정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

○ 앞으로도 국내외 디지털·플랫폼 금융 확산 추이, 국제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, 대응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.

□ 한편, 다음 제6차 「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(11월 개최 예정)」에서는 부동산 관련 현황, 잠재 리스크 및 향후 관리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	책임자	과 장	이동엽	(02-2100-2530)
		담당자	사무관	송희경	(02-2100-2531)
			사무관	최민혁	(02-2100-2534)

<공동>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	책임자	과 장	김종훈	(02-2100-29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은진	(02-2100-2971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	고상범	(02-2100-2850)
		담당자	사무관	윤영주	(02-2100-2851)
			사무관	김수아	(02-2100-2906)
<공동>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책임자	국 장	이창운	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류영호	(02-3145-8001)
<공동>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	책임자	국 장	김용태	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김택주	(02-3145-7125)
<공동>	예금보험공사 금융산업1부	책임자	부 장	유형철	(02-758-0901)
		담당자	팀 장	정승훈	(02-758-0920)

